

5.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정책 전환

5-1 제안 배경

화석연료는 한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2015년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82%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재의 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석탄 화력발전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전은 현재 25기가 가동 중이고,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신한울 3, 4호기, 영덕, 삼척 등에 6기의 원전을 계획 하고 있어 2029까지 총 36기의 원전이 들어설 예정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신규원전 추진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과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1990년 (1.1%) 이후 25년간 줄곧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하기 위한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신고리 5, 6 호기가 26% 정도 공정이 진행 중이나 인구 밀집도시와 활성단층 부근의 고리 원전 단지 지역에 이미 8기의 원전이 건설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하여 계획 단계에 있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영덕과 삼척의 신규 원전부지 선정은 주민투표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에너지기본법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형평한 에너지 체제를 위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신규 원전 및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수명을

다한 노후 발전소 폐쇄 등에 대한 원칙을 명시 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탈핵·탈석탄 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있으나 총리가 원자력진흥위원장도 겸하고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과 상충되는 역할을 겸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원자력 안전위원에게 조차 안전성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열람만 가능하게 하고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개선조치도 필요 하다.

5-2 정책 과제

- 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 탈원전·탈석탄 국가 에너지 로드맵 수립
- 신고리 5,6 호기 건설 중단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